

#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29호  
2019.10.21

## 정책동향

- ▮ 예정가격 결정시 설계가격 삭감 금지해야
- ▮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개 선정
- ▮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개선 과제

## 산업정보

- ▮ 덴마크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141개국 중 13위

## 건설논단

- ▮ 생활 SOC 투자 성공의 조건

## 예정가격 결정시 설계가격 삭감 금지해야

- 일본에서는 설계가격의 인위적 삭감을 위법 행위로 규정 -

### ■ 발주기관의 단가 적정성 검토,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 초과시에만 적용해야<sup>1)</sup>

- 최근 공공공사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우선 입찰 단계부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그런데 공공 발주기관에서는 정부의 원가계산준칙 및 표준품셈,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설계가격을 입찰 단계에서 일부 감액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사례가 존재함.
- 총사업비관리 대상 공사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해당 설계가격의 원가 내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단가(單價)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총사업비관리지침」 제22조), 이 과정에서 설계가격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음.
- 조달청에서는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량 구매하는 자재가격이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시공가격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감액하는 사례가 존재함.
  - 조달청의 자재 단가는 대량 구매를 통하여 축적된 것으로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존재함.
  - 수요기관에서 품셈이나 견적 단가를 적용했을 경우, 이를 계약단가나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함.
  - 조달청은 2019년 상반기 실시설계의 단가 적정성 검토를 통해 1,188억원의 사업비를 조정(증액 404억원, 감액 784억원)함으로써, 38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함.
- 일본에서는 적정한 적산 및 시장가격 등에 기초하여 산출된 설계금액 중 일부를 예정가격 설정 단계에서 인위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위법(違法)으로 규정하고 있음(「공공공사의 품질확보촉진에 관한 법률」 2014년 6월 개정).
  - 미연방조달청(GSA)의 경우, 최종 적산액이 발주자의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설계/건설턴트는 예산 내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코스트 절감안 또는 대체 입찰안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가 적정성 검토’ 제도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증감 사유와

1)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건설이슈포커스 “설계가격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의 개선 방안”의 내용을 일부 요약함.

내역을 공표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가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면, 이를 그대로 예정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렇지 않으면, 단가 적정성 검토제도는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큰 괴리가 있거나 혹은 원가산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로 한정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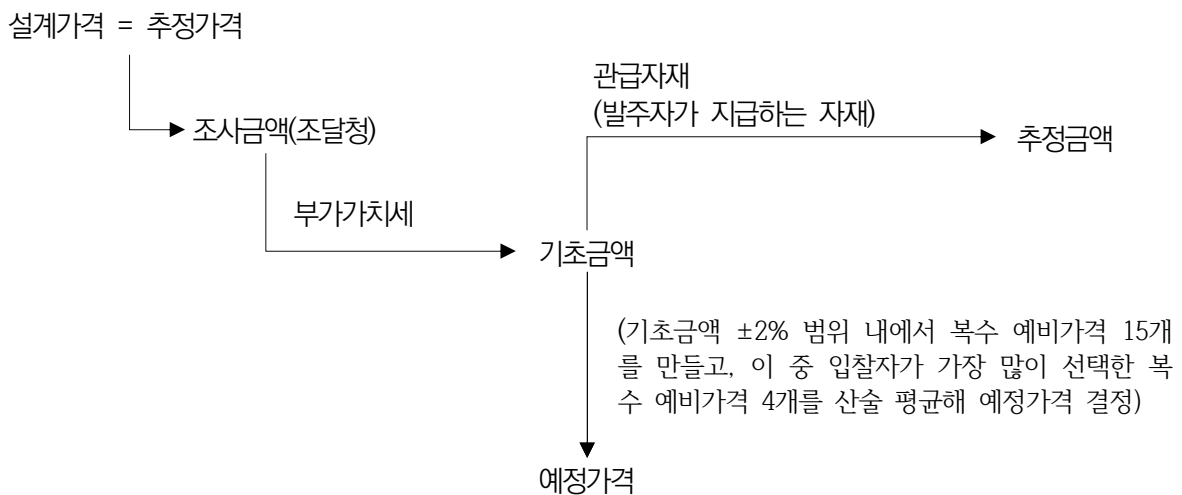
- 설계가격을 수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위반했거나 법적 요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일부 공종이 누락된 경우, 계산 착오나 중복 계산된 항목 등으로 국한해야 함.

**■ 낙찰률을 고려할 때, 예정가격은 발주자 예산을 일부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 「국가계약법」에서는 예정가격이 발주자 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으로 인하여 발주자는 설계가격이 발주자 예산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경우, 인위적으로 설계가격을 2%가량 삭감하는 사례가 존재함.

- 그 이유는 만약 설계가격이 사업 예산과 동등할 경우, 설계가격에 ±2% 범위를 두어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면, 이론적으로는 사업 예산보다 2%가량 높은 예정가격이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임.

<그림 1> 설계가격과 예정가격의 개념도



● 「국가계약법」 규정을 개선하여 기술형 입찰을 제외하고 낙찰가격은 사업 예산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되, 예정가격은 발주자의 예산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이 되는 기초금액 작성 기준을 개선하여 설계가격이 발주자의 사업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그대로 기초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최민수(선임연구위원 · mschoi@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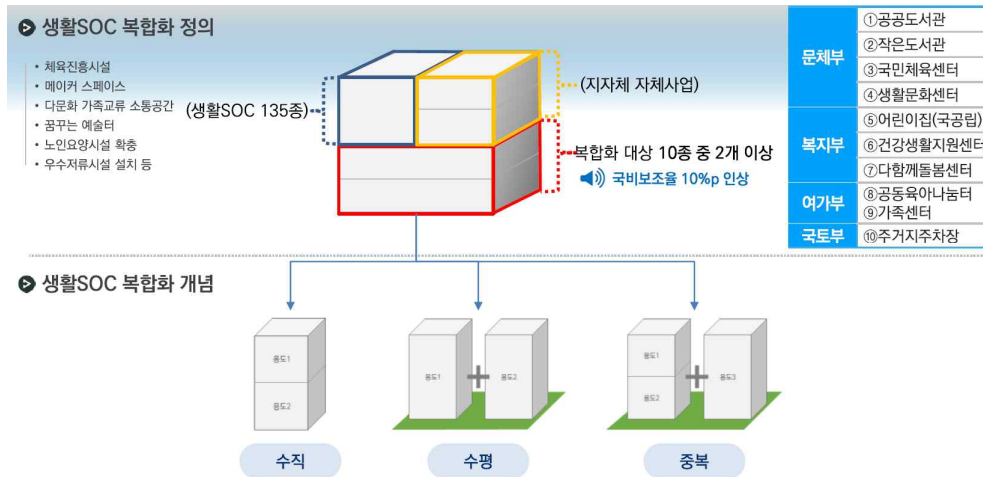
#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개 선정

- 3개년 계획의 본격적 추진 사례, 향후 민간의 역할 확대 모색 필요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발표

- 정부는 지난 10월 4일 2020년에 시행할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선정하여 발표함.
  - 4월에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서 3년간 총 48조원의 투자 계획이 구체화된 첫 사례임.
  - 시설 복합화는 생활 SOC 확충의 중심 전략으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생활 SOC 복합화는 2개 이상의 생활 SOC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임.
  - 복합화 대상 시설은 10종으로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임.
  - 복합화 사업의 인센티브로서 국고 보조율을 현행 대비 10%p 인상(3년 한시적)할 계획임.

<그림 1> 생활 SOC 복합화 개념



## ■ 289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8,504억원 지원

- 172개 시군구에서 289개 사업, 900개 시설이 선정됨.
  - 시설별로는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99개, 다함께돌봄센터 95개, 작은도서관 87개, 주거지주차장 75개 순임.

- 국비 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각각 2,670억원, 2,031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 거주주차장 1,359억원, 생활문화센터 1,150억원 순임.

<표 1> 2020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28건(14) 571억원	15건(10) 403억원	5건(5) 189억원	14건(9) 302억원	16건(6) 494억원	11건(5) 357억원	7건(6) 223억원	2건(1) 43억원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건(23) 1,756억원	24건(15) 651억원	8건(8) 236억원	22건(12) 671억원	19건(12) 475억원	18건(15) 465억원	30건(18) 945억원	23건(12) 600억원	3건(1) 123억원

주 : 괄호 안은 해당 시·군·구 수, 금액은 국비 지원 규모임.

### ■ 생활 SOC 복합화의 효과적 추진 위해 민간의 역할 확대 필요

- 생활 SOC들은 하드웨어보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운영이 중요한 시설들로서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시설들임.
  - 특히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는 복합화 시설에서는 운영의 효율성이 더욱 중요함.
  - 복합화 시설은 비교적 대단위 사업이 될 개연성이 크고 지방의 수요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
- 생활 SOC의 건설은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음.
  - 지자체 책임 운영의 원칙 하에 수익시설 입점, 공익신탁 펀드 조성, 지역사회 참여와 후원을 통한 운영비 조달 등이 운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의문임.
  - 시설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역량만으로 대부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재정투자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획, 건설 단계부터 운영 주체가 참여하는 등 민간 역할의 확대가 필요함.
  - 생활 SOC는 대형 건설사 중심이 아닌 지역 건설업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생활 SOC 사업은 3개년의 한시적 계획으로 종결될 수 없으며, 3년 후에도 생활 SOC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함.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추가 예산의 편성, 민간 매칭, 민간자본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협력의 틀이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승우(연구위원 · swoolee@cerik.re.kr)

#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과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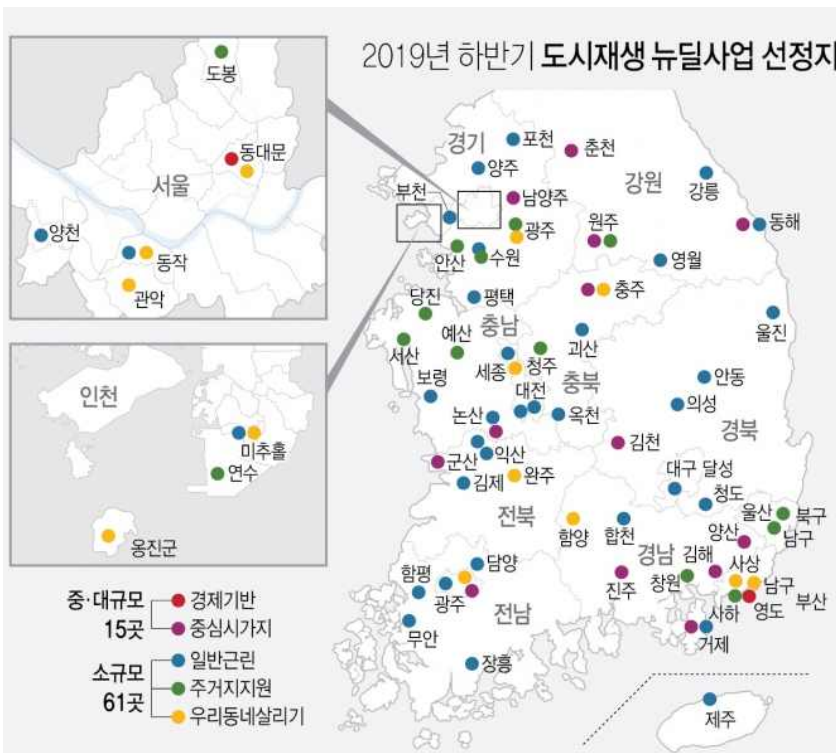
- 전국 총 76개 지역 선정, 생활 SOC 사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 예정 -

##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개요 및 특성

- 지난 10월 8일,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전국 총 76개소가 선정됨.
  - 중·대규모 사업으로는 경제기반형 2개소, 중심시가지형 13개소 등 15개소가 선정됨.
  - 소규모 사업으로는 일반근린형 34개소, 주거지지원형 14개소, 우리동네살리기 13개소 등 61개소가 선정됨.
- 상반기에 정해진 22개소를 더하면 2019년도에 총 98개소가 선정되었음. 이는 현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밝힌 연 100개소 내외 선정계획에 부합함.

<표 1>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2019년 선정지역

5개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대상 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 밀집지	저층 주거 밀집지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역사,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시·도(개)	중대규모	소규모
서울(7)	1	6
인천(4)	-	4
경기(10)	1	9
강원(7)	3	4
대전(2)	-	2
충남(6)	1	5
충북(5)	1	4
세종(2)	-	2
경북(5)	1	4
경남(8)	4	4
대구(1)	-	1
울산(2)	-	2
부산(4)	1	3
전북(5)	1	4
전남(4)	-	4
광주(3)	1	2
제주(1)	-	1
<b>계(76개소)</b>	<b>15</b>	<b>61</b>

자료 : 연합뉴스, 10월 9일 기사.

자료 : 국토교통부.

- 2019년도 선정에서 달라지거나 강조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sup>2)</sup>
  -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혁신거점<sup>3)</sup>과 생활 SOC 공급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 76곳의 사업지에서 116개의 혁신거점, 249개의 생활 SOC를 공급할 예정임.
  - 사업 구상서가 아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기 수립한 지역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였음. 따라서, 사업 선정 후 신속하게 사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의 준비 정도,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함.

**로드맵에 충실한 추진... 3년 차를 맞아,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과 과감한 개선이 필요**

- 사업 선정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계획에 전반적으로 충실함. 하지만 뉴딜 3년 차를 맞아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매칭 예산 마련.<sup>4)</sup>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구, 울산, 대전, 제주 등에서는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초지자체 수가 적어 1~2개의 사업지만 선정됨.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배정된 총액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음.
  - 선정된 지역도 사업을 맡아 추진할 공무원과 전문가 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식 또한 로드맵에서 제시한 것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음.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큼.
  - 모호한 정책목표, 낮은 주민 체감도, 공공부문 주도의 '보여주기식 사업' 위주 추진, 공적 재원 투입이 종료된 후 급격한 동력 상실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sup>5)</sup>
- 이 중에서, 특히 주민 체감도가 낮은 핵심 원인은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거의) 확충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도시재생 사업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그리고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고쳐쓰는 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현재의 도시재생 사업 방식과 더불어, 과감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부족을 꼽을 수 있음.
  -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재원 중심의 사업 추진을 꼽을 수 있음.
- 도시재생 뉴딜 3년 차를 맞아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과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감하고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요구됨.
  - 정책목표, 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예산 투입 규모의 적절성과 더불어,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 도시재생 뉴딜에 대한 종합적이고 진솔한 중간 점검이 필요함.

이태희(부연구위원 · thlee@cerik.re.kr)

2) 이태희(2019)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제717호, pp.6~7 참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보도자료만으로 확인 불가능 (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제출한 활성화계획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3) 창업문화주거복지 등이 집적된 복합기능의 앵커시설.  
 4) 전체 마중물 예산에서 기초지자체의 매칭 비율은 대개 전체의 25~28% 정도임. 따라서 특히 기존에 선정된 사업지가 많거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들은 매칭 예산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5) 이태희(2019) "도시재생을 재생하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6월 14일 세미나 자료 참조.

## 덴마크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 매년 3% 이상 성장, 낮은 산업 생산성을 극복을 위해 디지털 전략 지속 -

### ■ 덴마크 건설산업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3.5%와 3.2% 성장, 2019년 3.5% 예상

- 덴마크 건설산업의 연간 매출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500억 크로네(약 370억 달러)로 국가 전체의 7% 수준임. 건설업은 제조업, 금융 및 에너지 등과 더불어 주요 산업으로 분류됨.
  - 덴마크 건설산업의 고용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8만명 수준으로 국가 전체 고용 인력의 6%를 차지하고 있음.
  - 덴마크의 Productivity Commission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비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이 타 산업 대비 낮다고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덴마크 정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시행

- BIM 등 덴마크 건설산업 안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수준은 타 국가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타 산업 대비 디지털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 2018년 덴마크의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와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계약자의 32%가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디지털 기술 활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실무자 중 44%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및 IT 장비 활용에 익숙하다고 응답하였음. 하지만 실제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건설생산 프로세스의 개선 또는 변화를 경험한 경우는 17%에 그침.
- 덴마크 정부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은 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개방성, 신뢰, 교류의 확산도 목표로 하고 있음.
  - 전략은 크게 5개 중점 분야(디지털 기술 사용률 향상, 개방형 형식과 공통 표준화, 데이터 활용도 제고, 가치 사슬에 걸친 디지털 경쟁력 제고,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18개 세부 추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사용률 향상을 위하여 디지털 베스트 프랙티스 전파 등을 포함해 5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계획됨.
  - 개방형 형식과 공통 표준화에서는 기술 중립화와 BIM 표준화를 위한 국가 로드맵 구축 등 2개의



과제가,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영유지 단계에서의 데이터 공급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3개의 추진 과제가 포함됨.

- 끝으로, 가치 사슬에 걸친 디지털 경쟁력 제고와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각 5개와 3개의 세부 추진 과제가 수립됨.

<표 1> 덴마크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의 중점 분야와 추진 과제

중점 분야	세부 추진 과제
디지털 기술 사용률 향상	디지털 베스트 프랙티스 전파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지침 개발
	디지털 건설의 법적 체계 명확화
	새로운 협력 모델 개발 및 테스트
	발주자의 건적 시스템 체계화
개방형 형식과 공통 표준화	개방형 형식과 기술 중립화
	BIM 표준화를 위한 덴마크 로드맵 구축
데이터 활용도 제고	운영유지 단계의 활용을 위한 디지털 데이터 공급 체계 구축
	사업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데이터 생성과 관리 체계 구축
	국가 3D 도시 모델 연구
가치 사슬에 걸친 디지털 경쟁력 제고	건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역량 파악
	중소 건설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
	시행 프로젝트 중심의 경쟁력 제고
	디지털 인재 유치를 통한 건설산업 혁신 창출
	디지털 건설과 관련된 연구개발 확대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LCAbyg와 LCCbyg 개발 지속 <sup>6)</sup>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식 체계 구축
	시공 및 재료 기준 정립을 위한 기술 토대 마련

- 건설산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덴마크 정부는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해 산업의 전후방 관계 주체의 참여를 극대화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디지털 전환의 프로세스 수립과 당면 과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안과 참여자 간 지식 공유 및 교류가 본 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6) LCHbyg와 LCCbyg는 덴마크의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생애주기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임.

## 2019년 WEF 국가경쟁력, 141개국 중 13위

- 경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투자 늘려야 -

### ■ WEF 국가경쟁력 순위 보건 및 생산물 시장 지표 개선으로 전년 대비 2계단 상승

- 2019년 WEF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13위로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함.
  -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중에서는 5위(싱가포르(1)→홍콩(3)→일본(6)→대만(12)→한국(13))이며, OECD 36개국 중에서는 10위를 기록함.
  - 30·50클럽 중에서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은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상승하여 7개국 중 5위를 기록함.

<표 1> 30·50클럽 WEF 국가경쟁력 순위(2018→2019년)

미국(↓1)	일본(↓1)	독일(↓4)	영국(↓1)	한국(↑2)	프랑스(↑2)	이탈리아(↑1)
1→2위	5→6위	3→7위	8→9위	15→13위	17→15위	31→30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부문별로는 총 12개 부문 중 5개 상승, 5개 유지, 2개 하락함.
  - 우리나라는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과 적극적인 ICT 및 인프라 확충, 혁신성장 추진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 생산물시장의 경쟁 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전체 순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표 2> 우리나라의 4대 분야 12개 부문별 순위

분야	기본 환경				인적 자원		시장			혁신 생태계		
	제도	인프라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보건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금융 시스템	시장 규모	기업 활력	혁신 역량
2018	27	6	1	1	19	27	67	48	19	14	22	8
2019	26	6	1	1	8	27	59	51	18	14	25	6
변화	↑1	-	-	-	↑11	-	↑8	↓3	↑1	-	↓3	↑2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 12개의 부문 지표 중 인프라 부분은 6위로 나타났으나, 시설물의 순위는 낮아

- 12개의 부문 지표 중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위로 평가되었음. 세부 내용을 보면 서비스에 관한 지표들은 순위가 높으나 수도 및 도로, 철도, 항만의 연결성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도로의 질, 철도 및 항공 서비스 등에 있어서는 10위 이내의 수준을 보임.
- 반면, 도로 연결성, 철도 밀도, 공항 연결 정도, 수도 관련 세부 지표들의 순위는 20위권 내외로 아직은 선진국과의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철도 밀도 및 물 공급의 신뢰성은 지난해보다 순위가 낮아짐.

<표 3> 인프라 부문의 세부 항목별 순위

항목	순위		항목	순위	
	2019	2018		2019	2018
도로 연결성(Road connectivity)	26	N/A	해상 운송 연결 정도 (Liner Shipping Connectivity Index)	3	3
도로의 질(Quality of roads infrastructure)	9	12	해상교통 서비스(Efficiency of seaport services)	11	14
철도 밀도(Railroad density)	23	20	전력 접근성(Electrification access)	2	1
철도 서비스(Efficiency of train services)	4	4	전력 공급 수준(Electricity supply quality)	7	신규
공항 연결 정도(Airport connectivity)	16	16	위험한 식수에 노출된 정도 (Exposure to unsafe drinking water)	26	26
항공 서비스(Efficiency of air transport services)	8	9	물 공급의 신뢰성(Reliability of water supply)	28	23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 ■ 경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

- IMF는 글로벌 제조업 위축,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세계 및 한국 경제 전망을 지난 4월 전망보다 하향 조정하며, 세계 경제를 부정적으로 예측함.
  - IMF는 지난 15일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3.3%에서 3.0%로 0.3%p 하향 조정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도 2.6%에서 2.0%로 0.6%p 하향 조정함.
- 세계 경기 전망 하향 조정 속에서 주요 선진국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저금리 기조로 유지하고, 정부 부채를 확대하며 경기 회복에 힘쓰고 있으나, 그 여력에는 한계가 있음. 무역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지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5% 수준으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WEF는 우리나라에 삶의 질 제고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인적 자본, R&D 등에 대한 공공투자와 같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구조 개혁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다고 제언함.

엄근용(부연구위원-kyeom@cerik.re.kr)

## 생활 SOC 투자 성공의 조건

최근 정부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 289건을 선정, 발표했다. 향후 3년간 8,164억원이 지원된다. 전국 127개 기초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들을 사업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확정했다.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및 보육시설 등의 시설들이 포함됐다. 지방비 매칭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실제 사업비는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을 한 데 묶어 개발하는 복합화 시설로서 개별 시설은 900개에 달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사업비 방식이 매칭방식으로 투자될 계획인데, 물론, 지자체들에서 제안한 사업들인 만큼 지역의 투자 계획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비 마련은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로 그동안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주요 SOC 사업들이 사업비로 인해 사업추진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사실상 지자체들마다 예산 집행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사회복지 투자 압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원 방식 및 규모에 대해 실제 사업추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 수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각 사·도가 중도에 포기한 사업을 제외하고 신청한 모든 사업을 수용했다”고 하면서 지자체가 사업 발굴에 소홀했다고 항변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충분

한 수요조사와 지역의 특성, 그리고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성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자칫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가 현저히 적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지역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향후 생활 SOC 투자는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전제되기 위해선 이번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민의 구체적인 수요 파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들이 안고 있는 최근 문제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인위적인 지역민의 유출이다. 지역 발전에 있어 지역민의 감소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가능인력의 유출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지역민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자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생활 SOC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SOC 시설들이 공급된다는 것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적, 질적 생활 SOC가 공급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브릿지경제, 2019.10.7>